

도청별관 철거 논란에 발목 잡힌 靑 문화전당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의 장기화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문화전당 건립 부지 전경.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해법 못찾으면 국고확보 등 연쇄 차질

보존건물 활용 설계 용역비 이미 불용 처리 “문화수도 육성 정부 의지 희석 빌미 쥐어야”

지난해 6월부터 불거진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별관 철거문제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착공 7개월이 되도록 기초공사인 터파기 공사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관 철거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짓고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당 공사 차질=‘옛 도청 보존을 위해 공대위(공대위)가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연쇄차질을 빚고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10일 문화전당 공사가 전면중단 됐다. 문화전당 건립 공사는 지난해 6월10일 첫삽을 떼지만 별관 철거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사실상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당 건립 부지에 대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었지만, 별관 해체와 보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공사

가 중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개관 목표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에 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추진단은 공대위가 농성에 돌입하자 8여여 원을 들여 진행했던 상무관, 도청본관 등 5개 보존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및 리모델링 기본 설계를 지난해 8월 중단했다.

또 추진단은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보존건물에 대한 기본설계가 중단되자 본격 착공을 위해 울호 발주하려던 실시 설계마저 포기했다. 이에 따라 기본 설계 용역비 8여여원을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 처리했다.

◇전당 공사 재개해=‘옛 전남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사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대위와 전당 건립 주체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광주의 미래 비전인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측이 ‘철거불가’와 ‘철거방침 고수’라는 당초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별관 철거 후 별도 장소복원’, ‘별관 철거 후 모형 전시’, ‘전당 설계 변경’ 등 수용가능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국책사업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역할을 한 데 모아 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에 미온적인 새 정부로부터 전폭 지원을 이끌어내 침체된 이 사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질 별관 철거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내년 문화수도 조성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 예산처에서는 문화수도 조성공사와 관련 사업비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문화수도 예산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일지

- ▲2008년 6월24일 = 공대위 별관 철거 반대 농성 돌입
- ▲11월18일 =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공대위 시민대토론회
- ▲12월5일 = 시민단체 연석회의 도청 별관 상생전략 토론회
- ▲12월10일 = 아 문화전당 조성 공사 전면 중단
- ▲12월12일 = 추진단 기자회견, 지역 사회 협력 호소
- ▲2009년 1월5일 = 최협 문화수도조성위원장, 박명대 시장 등 간담회
- ▲1월29일 = 공대위 별관 최중안 도출?

“별관 철거, 5월 상징물 건립이 대안”

최협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광주 문화수도의 미래를 위해서 옛 도청 별관을 철거한 뒤 그 공간을 기리기 위한 5월 상징물을 건립하는 게 최협의 대안입니다.”

최 협(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더 이상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별관 철거논란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무관, 옛 도청 본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등 문화전당 건립 부지 내 5월 상징물 주요 건물 대부분이 보존 결정된 상황에서 별관 원형보존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제시한 별관 일부 존치는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관 철거라도 일부를 철거하고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관, 경찰청 본관, 민원실 등 문화전당 건립 부지 내 5월 상징물 주요 건물 대부분이 보존 결정된 상황에서 별관 원형보존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공대위가 제시한 별관 일부 존치는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관 철거라도 일부를 철거하고 보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감세·소비·투자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정부, 445건 연내 제·개정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감세, 투자 및 소비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21건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모두 445건의 법안을 연내 제·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일괄이양법 등 43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안은 정보격차 해소법 등 2건이다.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74건의 법안을 제출한다.

정부는 특히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주요 법안 21건을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올해 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47건 포함됐다”며 “노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최근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감세, 투자·소비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중소기업 및 서민 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56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432건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며 “올해는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해 법률안에 대한 국회 제출 시기를 연중 안배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청와대, 여론 더 지켜보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여론에 휩쓸리거나 여론에 올라타 김 내정자의 거취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뭐가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날 경우 유입되는”는 질문에 “법적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것(법적 책임) 못지 않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고 강조,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세상 일을 법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만 따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이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또 그러면서 감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만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동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의 인사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과 관련, “지금 시점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입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찬반양론을 어떻게 정리해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대변인은 이어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입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찬반양론을 어떻게 정리해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대변인은 이어 “책임소재와 관련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 설 전에 비해 과격시위에 있다는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김 내정자 거취에 대해선 유입 의견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찬반양론을 어떻게 정리해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빠른 직대리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항공** 상환합니다 www.kjair.co.kr

* **가솔의 때까지 상품과 처분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 **무안 - 상해(방콕) 직항!**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무안 - 상해(방콕) 직항!!!**

* **무안 - 상해(방콕) 직항!!!**

중국東方航空 광주MBC 문화항공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